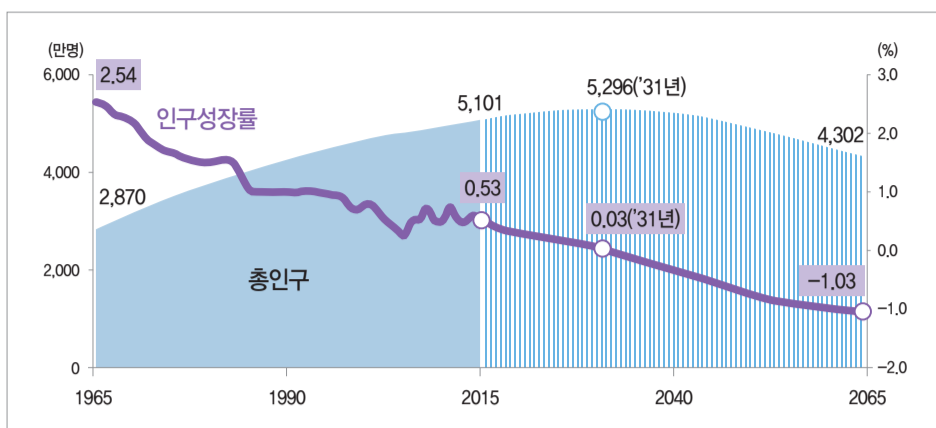


지방소멸위기, 특별법 제정으로 극복하자

지방소멸위기



○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성장률은 2032년부터 마이너스로 전환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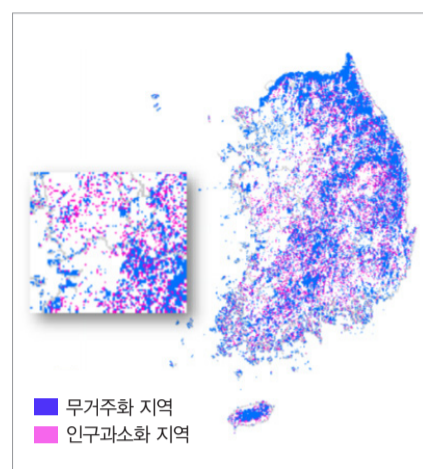
- 특히 유소년 인구가 2015년 703만 명에서 2020년 657만명, 2065년 413만 명으로 40% 이상 감소

○ 합계 출산율은 인구대체수준 2.1명(1983년)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중 최하위, 전세계 224개국중 220위 수준(2016 World Factbook, CIA)

- 2001년 초저출산 1.3명 → 2005년 최저 1.08명 → 2015년 1.24명

○ 2013년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은 국토의 53.3%이나, 2040년에는 61.1%로 증가될 전망(국토연구원, 2016)

○ 인구감소 → 성장 및 발전 불가 → 주민행정서비스 공급 불가 → 주민 생활 애로 → 국가위기 등이 발생하여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긴요한 시점임



(자료 : 국토연구원(2016))

관련 정책 분석 및 한계

○ 관련 정책

국토공간정책	지역개발정책	인구사회정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토기본법 제6조가 규정하는 국토종합계획, 도 종합계획, 시군종합계획, 지역계획 및 부문별 계획 수립 공간 중심의 계획제도는 지난 30년간 도시가 요구하는 물리적 기반과 시설을 양적으로 갖춰나가는 데 기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00년대 이전은 경제개발5개년 계획이 추진되며 국가산업단지 조성, 생산적 국토형성이 강조되었던 국가적 지역발전정책 추진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, 균형발전특별회계가 도입되면서 지역 중심의 지역발전 정책으로 전환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추진에 기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05년부터 저출산·고령화사회 기본법에 의거해 5년마다 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, 현재 제3차 기본계획(2016-2020)에 따라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 1.5명 목표 사업 추진 저출산 대책과 고령사회대책 등 주로 보건사회정책 위주의 출산·양육지원정책 추진

○ 기존 정책의 한계

개발 시대의 국토공간정책 위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출산, 고령화, 저성장 등 최근 환경변화를 국토공간정책이 반영하고 있지 못함 인구감소 등의 문제는 신도시 개발과 같은 외곽 확산형 대규모 단지 개발은 지양하고, 압축 도시 형태의 도시개발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에도 인구팽창시대의 개발 정책 추진
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부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개발 수단이 지역경제 활력 제고, 생활기반 인프라 확충 등 개발 시대의 사업내용으로 고착화되어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의 질 정책 추진 애로 부처별, 지자체별로 분절화된 사업추진으로 표준화된 삶의 질 서비스 제공 부족
보건사회정책 위주의 저출산·고령화정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는 다양한 지역발전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, 국가 지원정책은 보건사회정책 위주로 구성 출산수당 등 직접지원보다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간접적 지역정책으로 전환 필요

인구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(가칭)의 제정

○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

구분	내용
국제사회의 지역발전 패러다임 변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UN은 2015년부터 SDGS 목표 아래 개발시대의 격차문제 해결 등, 성장의 결실 재분배를 통해 더 나은 견고한 성장으로 향해간다는 포용적 성장이 국제사회의 핵심 의제가 됨
인구감소지역의 양극화 심화 및 주민의 삶의 질 저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의 인구감소는 기초 정주여건 미비로 인구유출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생활취약지역 증가, 생활사막(Life Deserts) 확대 전망 → 생활사막 방치는 각종 재해위험을 증가시켜 사회적 비용을 증대
기존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통합적 정책을 마련 필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의 지역발전정책은 개발시대의 SOC 확충 사업 답습 및 인구사회정책은 보건의료정책 한계 → 인구감소시대를 대비, 범국가적 대책 마련으로 인구구조 변화, 국내 총수요 감소, 저성장의 악순환을 타파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필요

○ 특별법 제정의 목적

- 인구감소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지역을 대상으로 범국가적 종합전략을 수립하여 인구 및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국가적 특별대책 마련

○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전략 마련

- 지역의 인구 및 쇠락문제를 정확히 진단하여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전략이 담길(가칭) 인구 및 지역활력 종합계획의 수립
- 인구활력, 경제활력, 지역활력 부문별 종합대책 마련
- 인구감소지역 선정, 인구유출 방지책 및 생활서비스 거점지역 육성 등 시책 추진

○ 인구위기지역이 스스로 지역 재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, 우수계획 및 시책에 대해서는 행정재정 지원

- 우수계획 수립 및 추진지역 인센티브 제공, 인구감소지역 특별회계 재원 편성 및 지원 등

▶ 본문보기 : 박진경·이소영(2016), 「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지역발전정책 방안」, 한국지방행정연구원

▶ 내용문의 : 이소영(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, sy2@krila.re.kr, 033-769-9890)

지난호 보기 : 지방자치단체 육아휴직 대체인력뱅크제의 개선 방향(손화정 수석연구원) [원문보기](#)

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 brief@krila.re.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.